

국감서 빛난 호남 중진 국회의원들의 내공

박지원·서삼석 등 6인 날카로운 문제 제기·대안 제시 문화콘텐츠 수도권 쏠림 지적·한전공대 사수 등 호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당초 우려대로 '기승전 조국'으로 마감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았다.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국토위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 4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 호남 중진의 내공을 과시했다. 주 의원의 '호남·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로 9년간 열차요금 6,235억 원 더 냈다'는 질의와 '수서발 고속열차 전라선 미운행은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으로 각 언론과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간 통합 등 철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대

안도 함께 제시해 국토부장관과 산하기관장들까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외투위의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동남 을, 4선)은 5·18 민주화운동의 실제적 진실 규명을 위해 미국 측이 관련 기록물을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우리 정부가 맡는 한편,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국제사회에 사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터줏대감인 박지원 의원은 (대안신당, 목포시, 4선)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별건수사 등을 없애는 강력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기소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기무사령부의 5·18 민주화운동 사진첩의 공개를 촉구했다.

문체위의 최경환 의원(대안신당, 북구 을, 초선)은 정부의 2018년 공모사업 가운데 콘텐츠분야의 79%, 문화예술분야의 72%가 수도권에 편중 지원된 반면, 광주 2~3%, 전남 1% 등 지방은 고작 1~3%를 지원받는데 그쳤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조성을 명목으로 막고 있다며 지역과 연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지역 언론에 부담이 되는 정부 광고 대행수수료 완화, '작은도서관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국립광주박물관에 '아시아 도자 센터' 건립 등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질의로 주목 받았다.

농해수위의 서삼석 의원(민주당, 무안·신안·영암, 초선)은 현장 위주의 생생한 문제 제기로 호평을 받았다. 서 의원은 가축 질병의 구조적 방역을 위해 방역청 신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회생을 위한 지자체와 회원 조합간 협력 모델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외국과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과시했다.

산자위의 송갑석 의원(민주당, 서구 갑, 초선)은 '한전공대 지킴이' 역할은 물론 정부 산업 정책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질타했다. 송 의원은 한전의 적자 등을 이유로 탄지를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짚어질 신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강력하게 맞서 호평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산업기술 R&D는 전국 대비 1.6%(1098억원), 산학 R&D는 전국의 4.1%(57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현대중공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한국가스공사의 비리 은폐사건, 한국광물공사의 300억원대 급여강 등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를 강력 질타. 중진 의원급의 화력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

'패스트트랙' 수싸움 본격화

사법개혁안 29일 자동 부의...민주 '속도' vs 한국당 '저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과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7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이때부터 상정·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면서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군소야당도 공직선거법에 앞선 검찰개혁법안의 처리나 공수처 설치 문제 등에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국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공조했던 여야 4당 협력 체제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가능한

만큼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가 확보되면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4당 공조 복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공수처 문제 등에 더 강력한 입장이며 당권파(9명)도 선거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4명)은 공수처 설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처리 순서는 '선(先) 선거법 후(後) 사법개혁법안'이 입장이다. 대안신당(8명)도 평화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다만 정의당(6명)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당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수도권 대학 정시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들에 정시 비율의 확대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된 바 있다는 점에서 SKY를 포함한 서울·수도권의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이 하한선을 더 높여서 추가 권고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교육단체 등을 초청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교육공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를 출범 시키고,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문제 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침을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유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의연석회의에서 학생종합부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정 학교 출신의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활발히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바른미래당 '다른 미래'

유승민 '12월 탈당' 예고...내홍 심화 당권파 내년 1월 창당 추진...안철수계 동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순학규 대표 측과의 극한 대립 끝에 '12월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내홍 양상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12월 탈당'을 놓고 유승민계 내부는 물론 안철수계도 미묘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는 안철수계 의원 7명은 22일 오전 같은 국민의당 출신의

원들과 비공개 회동하고 당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손 대표 측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동철 의원이 '당의 진로를 논의하자'며 마련한 것으로, 총 1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변혁에 몸담은 안철수계 의원들은 '12월 탈당'에 대해 "이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의원은 이날

"내년 1월 중에 신당 창당에 나서야 하며 보수로는 어렵고 중도개혁신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안철수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나오는데 대해 불편한 입장인데다 안철수 전 의원이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아 섣달 '탈당 열차'에 동승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더해 유승민계 내부에서도 '12월 탈당'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계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유 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한 것 같다. 현재 당 상황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전제이기에 그런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대안신당 창당준비 출범

대안신당은 22일 연내 창당을 목표로 내달 17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창당 목표 시점이었던 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일(11월 15일) 이전인 11월 초·중순보다 한 달 가량 창당 시간표가 미뤄진 셈이다.

김 대변인은 "창당 시점은 12월 중반 정도 예상한다"며 "정세 변화를 감안하자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방부 "춧불 계엄 문건 원본 확인할 것"

국방부는 22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춧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문건의 진위를 포함해 여러

가지들 본다든 뜻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국감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트윈스틸) MODERN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